

이슈브리프 통권127호  
(2019.6.7)

##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의 의미와 전망

제127호

임 수 호 안보전략연구실  
김 상 결 대외전략연구실



#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의 의미와 전망

임 수 호 (안보전략연구실) · 김 상 결 (대외전략연구실)

지난 5월 9일 미국 법무부가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Wise Honest) 몰수 소송을 두고 북미 양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5월 14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조치가 “불법 무도한 강탈행위”이자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부정”이라며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5월 21일에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는 “유엔헌장 및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 위반”이라며 선박을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및 몰수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대북제재의 지속과 철저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선박 반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경과 의미,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북미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간략하게 전망하고자 한다.

## 사건의 배경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모닝 글로리호’(유조선, 2.2만톤급), ‘해돋이호’(벌크선, 1.7만톤급)에 이어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상선(벌크선, 1.7만톤급)으로, 조선인민군 송이 무역회사의 자회사인 송이해운회사(대표 권철남)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이 선박은 남포항에서 무연탄을 싣고 모처로 향해하던 중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후 미국에 인도되어 같은 해 7월 법적으로 압류되었다.

미국 법무부의 기소장에 따르면, 미국이 이 선박을 압류하고 몰수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및 미국 국내법상 대북 수출제재, 수입제재, 그리고 금융제재 위반이다.

첫째, 안보리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된 2016년 11월 이후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되기까지 수차례 무연탄 수출에 이용되었다고 한다(수출제재 위반). 주지하듯이 안보리 결의안 2321호(2016.11)는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수출 제한(700만톤/年 상한)을 두었고, 결의안 2371호(2017.8)는 북한산 무연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따라서 최소한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무연탄 수출은 유엔제재 및 관련 미국의 국내법인 대북제재강화법(2016)에 대한 위반이다. 단, 미국은 무연탄 수입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둘째, 안보리 결의안 2397호가 채택된 2017년 12월 이후 중장비 등 수입 금지품목 수입에 이용되었다고 한다(수입제재 위반). 안보리 결의안 2397호(2017.12)는 북한의 기계·전기전자·운송기계·기초금속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유엔제재 및 대북제재강화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 미국은 대북 중장비 수출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송이해운회사의 대표인 권철남은 미국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여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약 75만 달러)을 송금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위반이며, 유엔제재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단, 미국은 유지·보수 업체와 자국 금융기관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히 해당 금융기관은 제재 위반 사실을 몰랐다(unwitting)고 적시하여 면죄부를 제공하였다.

## 사건의 의미와 쟁점

이번 사건은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가지는 함의가 적지 않다. 첫째, 과거에도 북한 선박이 억류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압류·몰수된 사례는 극히 드물며, 특히 미국에 의해 직접 압류·몰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컨대 2002년 12월,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서산호가 공해상에서 미국과 스페인 당국에 의해 나포된 적이 있지만, 국제법적 근거가 없어 바로 풀려났다.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이다.

2013년 4월에는 미사일을 싣고 쿠바에서 북한으로 가던 청천강호가 파나마 당국에 억류되었다. 쿠바가 보유한 소련제 미사일, 전투기 등을 북한에서 수리하기 위한 목적

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에는 이미 대북 무기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제재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청천강호는 70만 달러의 벌금만 내고, 2014년 1월 북한에 반환되었다.

북한 선박 중 처음으로 외국에 몰수된 것은 무두봉호이다. 무두봉호는 2014년 7월 멕시코 해역에서 좌초된 후 억류되었다가, 2016년 4월 몰수되었다. 2014년 6월 유엔 제재대상에 등재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OMI) 소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멕시코 당국이 처음부터 몰수를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환을 목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6년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몰수조치를 단행했다. 따라서 억류 직후 미국이 개입하여 압류·몰수를 진행한 ‘와이즈 어네스트호’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 사법 당국이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인도받아 법적 압류조치를 취한 시점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7월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제재 관련 법 집행은 북미간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추진된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다. 또한 존 데머스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에 따르면,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감시와 추적, 억류, 조사, 그리고 압류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국 FBI·법무부·국무부·재무부·해안경비대, 나아가 각국 사법·정보당국의 철저한 공조가 이루어졌다. 이는 향후 선박을 통한 북한의 불법 수출입 및 불법 금융거래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은 선박의 압류·몰수 자체보다는 대북제재망이 강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셋째, 미국 국내법으로 유엔제재의 집행력을 뒷받침했다. 유엔 결의안은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압류·몰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간 제재의 실제 집행 및 처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미국은 이를 감안하여,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을 제정하면서 제재 위반 선박의 압류·몰수 조치를 명문화하고, 대외경제비상조치법(1977)에 근거한 민형사상 처벌 규정을 삽입하였다. 예컨대, 대북제재강화법의 관련 조항(22 U.S.C 9225c)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한 선박 중 1년 내 북한에 입항한 적 있는 선박은 국적을 불문하고 압류·몰수할 수 있다. 또한 대북제재강화법의 다른 관련 조항(22 U.S.C 9214)에 따르면, 제재 위반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대외경제비상조치법

(50 U.S.C 1705)상 민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몰수 민사소송은 이러한 국내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넷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 재산에 대한 미국의 압류·몰수 조치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가 여부이다. 물론 이번 조치 자체의 정당성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된다. 유엔헌장 제41조(비군사적 조치)나 제42조(군사적 조치)에 따른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에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불법 거래 관련 북한 선박에 대한 압류·몰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 것은 유엔의 집행기구가 아닌 회원국의 집행기구가, 국내법을 적용하여 외국 자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내법에 따른 조치라고 하더라도 국제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유엔 결의에 따른 1차 이라크 전쟁(1990)과 유엔 결의 없이 감행된 2차 이라크전쟁(2003)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의 차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은 이번 조치의 불법성의 근거로 <국가 및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2004.12)을 제시하고 있다. 이 협약의 기본 전제는 “주권국가 및 그 자산은 특정 국가의 국내법적 관할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미국 국내법에 따른 북한 선박 압류·몰수 조치를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은 아직 미발효 상태이다. 30개국의 서명·비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 28개국 서명, 22개국 비준).

## 전망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지속되는 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실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재의 도입이 아니라 기존 제재의 ‘이행’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압류는 북미관계가 가장 좋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재의 ‘새로운’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제재의 유일한 탈출구인 해상밀수가 사실상 봉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번 조치에 대해 “6.12 조미 정상회담의 기본정신에 대한 부정”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북한이 선박 압류 시점인 2018년 7월이 아니라, 몰수 소송이 제기된 2019년 5월에야 정식 대응을 내놓은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은 이번 사건을 정세 돌파용, 즉 대미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좀처럼 협상 재개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화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긴장조성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연말까지는 협상을 모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심각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하는 경우 한국이나 미국은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연쇄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그 자체로도 매우 복잡한 사안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외부변수까지 개입되면 진전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미 모두 동 사안을 지나치게 정치화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